“米친개방 안돼” 쌀쌀한 농심 … “米룰수 없다” 고민하는 정부

쌀 전문 수입개방 찬반논쟁 후끈

찬 “차라리 개방해 높은 관세 부과하자”

반 “농업 경쟁력 취약, 농가피해 불가피”

정부가 사실상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관세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내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쌀 수입개방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중 FTA에도 악영향=쌀 수입개방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한중 FTA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쌀 시장은 개방하면서 다른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FTA와 연계해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더 낮은 우대관세를 요구할 우려도 있다. ‘쌀을 개방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봇물 터지듯 세계 각국의 수입 요구가 빗발 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쌀을 개방하면 DDA(도하개발아젠다)와 FTA 협상에서 쌀을 예외 조항으로 취급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MMA) 이외의 추가 수입이 없어 국내 쌀 물량의 예측이 가능해 가격 조정 등이 쉽지만 전면 수입되면 손을 쓸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값싼 외국산 쌀이 몰려들어 국내 쌀 농가의 폐업이 잇따른 상태에서 외국이 쌀값을 갑자기 올려도 대처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예 추가 연장 절차 복잡=정부가 쌀 관세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이 까다롭고, 대가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쌀 관세화 추가 유예를 신청한 필리핀의 경우 ▲의무수입물량(현재 35만t) 증량 ▲세율(현재 40%) 인하 ▲국별 쿼터 인정 ▲쌀 이외 타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를 받고 있다.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더라도 쌀 수입물량은 늘 수밖에 없고, 세율이 인하돼 더욱 값싼 외국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쌀 개방을 늦춰주는 대신, 다른 품목에 대한 개방 압력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성적인 쌀 부족국가인 필리핀의 경우에는 의무수입물량을 늘려도 수급 관리에 부담이 없지만 쌀을 자급하고 있는 한국은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면 그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농민단체 등 거센 반발 예상=쌀 수입 문제는 찬반 논쟁이 뜨거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연일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었던 쇠고기 수입 문제보다 더욱 폭발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각에서는 어차피 의무수입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라리 쌀 수입을 개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쌀 표본 1282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쌀 관세화의 찬성률이 77.7%로 나타났다. 관세화에 찬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높은 관세로 쌀 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 계열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최근 전국 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관세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19.1%에 불과했고, 관세화 유보는 36.6%에 달했다.

이처럼 어떤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쌀 수입 문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벼농사 의존도가 높은 전남의 경우에는 쌀 개방에 따른 피해에 더욱 취약해 지역 농가의 반대가 더욱 거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박형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개방만 운운하는 것은 농민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면서 “조만간 농민단체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부가 사실상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관세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쌀값 하락 등 피해를 우려한 농가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벼가 누렇게 익은 해남 산이면 들녘. 〈광주일보 자료사진〉

농수산물 관세 인하 쟁점

한중·FTA 양허 협상 국면

우리나라와 중국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품목수 90%, 수입액 85%의 자유화(관세철폐)율에 합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틀인 1단계 모델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가 만들어짐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양허 협상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1단계 타결은 작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1년 4개월 만이다.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에 합의한 시기가 2004년 9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9년 만에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온 셈이다.

두 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전체 품목수(1만2000개)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이는 초민감품목의 범위를 품목수 기준 10%(1천200개), 수입액 기준 15%로 설정했다는 뜻이다. 한-미 FTA(각각 0.2%, 0.4%), 한-유럽연합 FTA(각각 0.4%, 0%)에 비해 보호 품목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한·중간 본격적인 품목별 2단계 협상은 오는 11~12월 개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여야, 당론 확정 못하고 ‘미적’

정치권 입장

전면개방 대비책 준비

쌀의 전면 수입 개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아직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 개방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불가피한 개방이라면 조기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쌀 수입 개방 문제를 먼저 논의 선상에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 5월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의원 워크숍 자료에서 “만약 우리가 2015년에 또다시 관세화 유보를 요구하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추가 요구 등 불리한 조건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MMA 방식에 따라 해마다 제한된 양만 수입하는 쌀수입 관세화 유예시한이 종료되면 쌀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자료를 활용해 국제가격·환율·관세상당치 등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최악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관세화 전환 시 저율관세할당(TRQ) 외 추가 수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타 품목 보호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관세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쌀 관세화와 MMA 방식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은 내부적으로 검토되거나 전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명했지만, 워크숍 자료는 당내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새누리당=역시 구체적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정회의에서 한 번 거론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27일 국회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당정협의에서 쌀 목표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쌀 수입 개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MMA 방식에 따라 해마다 제한된 양만 수입하는 쌀수입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 만료되는 것과 관련, 더 이상 관세화 유예가 어렵다면 관세부과를 통한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한 대책을 조기에 세울 것을 주문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현오석 부총리 “농업은 식량안보 국가의 근간”

농심 달래기 나선 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농업은 국민의 먹을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의 근간”이라며 “기재부와 농식품부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첫 농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다른 부처와도 간담회를 열겠지만, 농식품부를 가장 먼저 초대한 건 농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많은 대책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농업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절만 되면 농산물 가격이 치솟거나, 농민은 제값을 못 받는데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내야 하는 농산물 수급의 미스매치도 고질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농업 분야에 기대되는 점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을 거론했다.

현 부총리는 “중국에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농산물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대단히 높다”며 “중국은 거리도 가까워 내수 시장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만큼, 한국 농산물의 수출확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농민들 사이에선 정부가 한·중 FTA를 추진함에 따라 불만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 변경, 고추·축산물 등의 가격 하락, 농산물 수급 불안도 중요한 농정 현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농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 계획을 토대로 농식품 분야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Dream & Smile
동신대학교가 달립니다

동신대학교는 사회와 호흡하며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20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12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정 10년간 매년 2억원씩 20억원 지원
2013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 1년간 24억여원 지원
2012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선정 5년간 총 183억원 지원

졸업생 1천명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2009, 2010, 2011, 2013년 취업률 1위

2014학년도 신입생 장학혜택

★수능 1등급: 4년간(8학기) 등록금 전액, 기숙사, 월100만원, 해외연수 —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이상1등급 이내, 탐구영역 2과목 평균등급 1등급 이내
★수능 2등급: 4년간(8학기) 등록금 전액, 기숙사 —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 탐구영역 2과목 평균등급 2등급 이내
★수능 3등급: 2년간(1,3학년) 등록금 전액 —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이상 3등급 이내, 탐구영역 2과목 평균등급 3등급 이내
★수능 4등급: 1년간(2학기) 등록금 전액 —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이상 4등급 이내, 탐구영역 2과목 평균등급 4등급 이내
★수능 5등급: 입학시 등록금 반액 —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2개 이상 5등급 이내, 탐구영역 2과목 평균등급 5등급 이내

학생부 장학금 - 1등급 1년 등록금 / 2등급 입학시 등록금 전액 / 3등급 입학시 등록금의 30% / 4등급 입학시 등록금의 20%

★2014학년도 동신대학교 수시1차모집 | 9월 6일~13일(오후6시까지)★

동신대학교